

국내에 R&D센터 짓는 해외기업 지경부, 현금 지원한도 40%로 확대

외투자지역 8곳 신규지정

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연구·개발(R&D)센터 유치를 늘리기 위해 국내에 R&D센터를 짓는 해외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30%에서 40%로 확대하기로 했다.

지식경제부는 18일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.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제도는 투자 금액 대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. 지경부는 기술 이전 및 고용 창출 효과금 지원제도는 투자 금액 대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. 지경부는 기술 이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해외 기업의 R&D센터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10%포인트 높이기로 했다. 지경부 관계자는 “R&D센터 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현대오일뱅크와 미국 정유회사 셀의 유틸리티 합작사인 현대셀베이스오일 등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도 신규 지정했다.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7년 감면(5년 100%, 2년 50%),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가 감면된다. 지경부는 이번 개별형 외투자지역 신규 지정을 통해 향후 2조원의 투자효과와 5만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.

정부는 또 이날 경제자유구역 내

신규 지정된 8개 개별 외투자지역

닛소남해아그로(전남)

현대셀베이스오일(충남)

골드펌프(충북)

울산아로마틱스(울산)

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(충남)

동우화인켄(전북)

아드반테스트코리아(충남)

ASE(경기)

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 사전심사제 내용을 담은 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’을 의결했다.

전심사제 내용을 담은 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’을 의결했다.

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3억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았지만, 사전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5000만달러만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문광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4년(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)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(30일 연장 가능)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. 지경부는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,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.

이정호기자 dolph@hankyung.com